

지역현안긴급포럼1.

0522_공동체라디오, 정규사업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전문 녹취록

사회	이상훈 /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발제	정수경 / 성서공동체라디오 대표
발제 II	김경환 / 상지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토론 I	정 승 / 방통위 지상파방송과 사무관
토론 II	김서중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토론 III	송덕호 / 한국커뮤니티라디오 방송협 의회 사무국장, 마포FM 방송본부장
토론 IV	최연진 / 태백 공동체라디오 준비모임

이상훈(사회) : 학회에서 지금까지 공동체라디오와 관련해서 다룬 적이 없었다.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자리가 참 의미 있다.

- 발제 -

▷ **정수경** : 3년 동안 강의, 토론회 발제 등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번처럼 발제를 준비하면서 긴장과 고민이 많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정식 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 3년간 공동체라디오가 걸어왔던 이 길을 제대로 설명해 낼 수 있을까. 또 수많은 성과와 그 진정성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공동체라디오라는 비영리방송국이 얼마나 많은 정신적 부를 창출할 수 있는지, 현대인이 잃어가고 있는 마음의 위안과 위로의 가치를 공동체라디오가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에 관련해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공동체라디오는 정부의 정책으로서는 방치된 사업이었다. 3년 동안의 방치 속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시범사업자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라디오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왔다. 최근 이러한 공공성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동체라디오와 같은 '저비용 고효율의 공익적 가치실현 미디어' 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에 없었고, 그 역사 한가운데에 공동체라디오가 있는 것이다. 방송국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적은 출력과 비용으로 알뜰살뜰하게 방송의 공익성을 실현해 온 미디어이다. 실제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오늘 정식사업의 모델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겠다.

1)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신장이 가장 큰 성과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청소년, 정책소수자, 지역주민, 이주노동자 등,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자신들이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공중파 방송에서는) 주인공이 될 수 없지만 그들은 모두 절실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방송의 울림들이 큰 내용이지 않을까 싶다.

2) 공동체라디오는 방송의 공익성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충분

히 기여한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콘텐츠로 개발되기 때문에, 계층간 · 세대간의 소통의 창구로 기능하게 된다. 어렵지 않게 계층간 · 세대간 갈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면서 소통하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공동체라디오는 즐거운 종합선물세트라고 말한다.

동네 이장이 '아아~ 동민 여러분' 하는, 그런 소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에 공동체라디오가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의 의제들을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또 만들어 나간다. 우리 사회에서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자치에 대한 정치적 변화의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의제이기도 하다. 공동체 라디오는 그런 기능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는 유력한 매체이다. 2005년 지방선거 때 선거방송을 해 봤는데, 보통 의원들은 어떤 매체도 다루지 않지만, 공동체라디오는 지역자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원들을 모셔다 놓고 질문 답변하는 선거방송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다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쌍방향 소통의 창구로서의 공동체라디오다. 공동체라디오는 자신이 방송의 제작자이면서 동시에 청취자이다. 비전문가들인데 문제가 많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원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방송사고다. 또 비전문가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콘텐츠 질(質)의 문제가 있다고도 말한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나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디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아니라 중요한 특징이고 장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4) 인력개발의 창구로서의 공동체라디오. 평범하게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이 방송제작에 참여한다. 이 분들은 공동체라디오를 만나고 나서 라디오방송 제작과정에 금방 숙달되고 나아가 전문가가 되어가기도 한다. 또 평범한 주부들이 그 지역 의제에 관심을 갖는 인력으로 개발되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한다. 이렇듯 사회적 전문 인력들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 공동체라디오가 갖는 중요한 특질이다. 나는 소외계층에 대한 문제, 공동체에 대한 문제보다도 인력개발과 인력창구로서의 공동체라디오의 기능을 더 높이 사고 싶다.

이렇듯 공동체라디오는 수많은 눈부신 성과들을 가지고 있는데, 정식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한 공동체라디오의 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역 정보제공과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지방자치시대에 대응하고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소규모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 증대, 주민이 방송의 주인으로써 지역민의 방송 접근권 확대와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복지 증진기여' 라고 하였다. 정책적 기본방향이 이러하다면 세부적으로 집행해야 할 정책방안도 이 기본정책방향 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실제 세부정책들에서는 이 기본정책들이 온전히 반영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늘 기대한다.

1) 공적 재정 지원

공동체라디오방송에는 공적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 기부, 지자체의 재정충당으로 재원을 충당하라고 하고 있다. 기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자체의 지원은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고, 광고시장 역시 그 지역에서 형성되고 출력증강을 위한 재원으로 형성될 정도는 아니다. 기부도 마찬가지다.

2) 출력증강

방송제작에 대한 꿈은 크든 작든 똑같은데, 최종적으로 출력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3년간 고생한 에피소드는 수없이 많다. 광고든 기부든 이것으로 재원충당이 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재정적 지원 중단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3) 정책의 탄력적 적용

정책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익적 가치를 무궁무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이 매체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냐. 공동체라디오에 적합한 장비 등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들이 안(案)을 만들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 논의들을 공동체라디오 사업자들과 함께 좀 더 진지하게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들은 3년간 수없이 얘기해 왔던 문제들이다. 우리는 돈을 만들어내는 방송국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방송이지만, 3년 동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울림을 만들어 왔다. 무너져가는 지역공동체 복원, 지역 기초인프라 구축 등 많은 가치를 만들어 왔다.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에 대해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한다.

▷ **이상훈** : 출력증강문제, 공적지원의 필요성 등이 첨예한 문제가 된다. 내가 있는 전북지역에서도 몇몇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 왔었는데, 결국 주체가 어떻게 되어야 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흐지부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김경환 교수께서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 **김경환** : 성서지역에 가서 라디오를 들어 봤는데, 하고 있는 바로 앞에서도 아파트가 좀 뒷줄로 들어가면 위치에 따라 들리지 않을 정도이다. 공동체라디오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듣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거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단지 상징적으로 '이런 공동체라디오라는 사업을 하고 있다.' 는 식으로 알려진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체라디오가 우리사회에 도입된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지역의 문화와 특색 등이 조금씩 정립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공동체라디오의 필요성이 예컨대 재난, 재해와 관련한 방송 등 그런 차원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체라디오의 정규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입에 있어서 몇 가지 현안이 있다.

1) 사업자

사업자 선정안에 관련하여, 그 전에 도입되었던 사업자 선정의 틀이 있다. 그 큰 틀을 거의 바꾸지 않는다. 그 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누가 운영주체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있다. 정부 · 지자체 · 종교 · 정당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은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 놓았다. 그래놓고 재원은 광고로 충당하라는 식의 모순들이 발견된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나 케이블의 공익채널들에게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라' 고 말하는 것이 모순이다. 마찬가지로 설립된 단체 자체가 비영리법인인데 '돈을 벌어서 해라.' 라고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영리로 운영이 되면 효율성이나 물질 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공동체라디오 도입 목적 자체가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목표가 달성되는 성질의

매체가 아니라는 차원에서, 재원을 광고로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공동체라디오 사업자 선정시 지역에 기여가 확실한 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선정과정을 보면 회계, 기술 등의 전문가들이 들어가 점수를 매긴다. 회계적 전문성 등에 대한 판단이 주를 이루는데,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돈이 많고, 지역에 대한 목표에는 관심 없지만 돈이 많고, 지역에서 좀 어깨에 힘을 주고 싶고, 부각되고 싶은 사람들이 결국 공동체라디오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해당 지역단체의 지역에서의 기여성을 평가할 수 있는 툴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심의와 관련해서는 대폭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폭력적 · 외설적 내용을 허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나 문서작업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출력

재원과 섞여있는 문제다. 이미 시장에 진입해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상당히 경계를 하는 측면이 한 부분이다. 공동체라디오의 가장 큰 문제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력의 전체적 증강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인데, 사실 여기에는 동전의 양면 같은 측면이 있다. 출력을 낮추면 공동체라디오를 여러 지역에 세세하게 나누어서 많은 공동체라디오를 설립할 수 있고, 지역적 다양성을 부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청취지역이 작아지므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출력을 높이면 지역미디어로서의 공동체라디오의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의 출력으로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출력은 더 높여야 한다. 다만 일률적으로 출력을 정해놓으면 공동체라디오의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보아도 천편일률적으로 출력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사업 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3) 재원

아까 말한 대로, 비영리단체에게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되므로, 문제가 있다. 출력을 낮추려면 공적지원을 해야 한다. 이건 붙어 있는 얘기다. 한국의 라디오방송시장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광고로 먹고 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광고수입을 늘리려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지금 매년 라디오광고비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민방계열 라디오 방송사의 광고매출액이 1년에 10억이다. 1달에 1억이면 나쁠 것 없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 본질을 보면 '끼워팔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순수하게 지역방송사에 들어오는 매출액은 액수로 환산하기 민망할 정도다. 자체적으로 광고 영업을 한다면 영업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안 나올 거다. 즉 지금 상황으로서는 무책임한 얘기라는 것이다. 차라리 광고 말고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해외에서는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공적지원이 존재하고, 공동체라디오는 그것을 토대로 활성화된다. 공적지원이 있어야지만 광고나 기부금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합리적인 지혜를 내면 충분히 공적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 없는데 무리해서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공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한다. 2000년 이후부터 많았던 과거 신규매체 도입의 역사를 보면, 그 매체의 정체성 고민이 없었

던 탓에 위성DMB나 스카이라이프 등은 망하기 직전까지 가있다. 매체의 정체성과 필요성을 고려해서 도입한 이상, 그 매체의 육성까지 고려한 성숙한 규제가 되어야 한다. 명확한 정책적 의지와 대안을 세워, 공동체라디오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 안에서 사명감을 갖고 갈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8월에 정규사업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늦춰져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부터 한 3개월동안 정책적인 공백기간이 있었다. 이번 달 들어서 겨우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백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생각했던 스케줄대로 가면 자칫 졸속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신규매체 사례를 봐도, 좀 천천히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그 매체의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수천억 적자를 내면 결국 그것들은 모두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시간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래야 위상을 더욱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 **이상훈** :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정체성, 사업의 성격 규명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 핵심으로 이야기되었다. 사업자선정, 자원, 출력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결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라디오 사업자선정을 하다보니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소출력 라디오를 선정하나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지역에 꽤 있었다. 실제 공동체라디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공동체라디오라고 하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방송영역이기는 하지만,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 여러 가지 지역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매체 정체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 주셨던 것 같다. 또 방송발전기금 사용목적은 보면 현재 존재하는 조항만 가지고도 공동체라디오를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 토론 ① -

▷ **최현진 (태백 공동체라디오 준비모임)** : 강원도 태백에서 공동체라디오를 준비하고 있다. 저희들은 2004년도 시범사업 공모부터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는 선정 받지 못했고, 여태까지 해매고 있다. 너무나 긴 시간이었지만, 공동체라디오가 지역에서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려 있다. 기대만큼 되지 않아서 지금 내부에서도 동력이 떨어져 있고, 작은 분열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는, 어느 시점에서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다려야겠다는 마음이다.

막연하게나마 공동체라디오의 어려움을 감지하고는 있었는데 오늘 발제를 통해 들어보니 방송도 안 들리고, 돈도 안 되고, 지원도 끊긴다는데 이런 방송을 왜 해야 할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봤다. 공동체라디오가 지역에서 지역민과 부딪치며 어울릴 수 있는 최고의 매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 내에서 소통의 문제가 그리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작은 매체를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다면 이 사업은 반드시 이어지고 이루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지난 2006년 12월에 가용주파수 조사를 해서 방송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는 있는 건지, 없어지지는 않을지 우려 섞인 마음이 사실 있다.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결과 발표가 있으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놓일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없으니 굉장히 답답하다.

태백뿐만 아니라 전국 20여개의 준비지역에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정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사업이 좀 늦어지면 늦어진다고,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주고 좀 복돋워 주면 기다리는 것도 쉬워질 것 같은데 안타깝다.

그러는 과정에서 귀동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시범사업과 신규 사업이 별개로 간다는 등의 얘기를 들으면 우려가 된다. 예산문제에서도 정부 지원이 안 된다는 소리가 들리니 답답하다. 방송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정부의 관계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의 문제로 인식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정부가 원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한다. 공동체라디오는 작지만 지역매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아까 나온 얘기처럼 재난방송 등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공동체라디오는 중앙방송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 지역 구석구석까지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다.

노동부나 복지부 쪽에서 하는 일 중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이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 어려운 시범사업자들에게 인력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많은 돈이 되지 않더라도 한 방송국당 2명 정도 지원해 준다면 전체 30여개 방송국에 60여명정도 지원해주게 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다. 방송국에서 가장 힘든 것이 인력 부분이므로 국가가 주도해서 인력을 지원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송덕호 (한국커뮤니티라디오방송협의회 사무국장, 마포FM 방송본부장)** : 이제는 방송위원회가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정책을 결정할 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 이 토론회가 시기적절하게 마련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발제에 대해 큰 이견이 있지는 않은데, 김경환 교수가 출력 문제를 지적해 주신 내용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한 마디 덧붙이고 싶다.

'공동체라디오의 현재 출력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까봐 우려스럽다. 이 문제는 공동체라디오 정책에 대한 재판단이 요구되는 문제다. 와트 중심의 출력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방송이 들려야 하는 공동체의 크기에 따라서 출력은 가변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출력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방통위가 기존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파수나 전파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없는 상태이다. 실제 주파수 환경이 어떤지 접근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린 판단 같다. 주파수 환경에 대해 이제는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송위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정책검토를 다시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통부가 공식적으로 추진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10와트까지 출력을 올려도 방송권역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두 군데에서 필드테스트를 했는데, 예컨대 분당FM에서는 1와트에서 3와트로 증가시켜도 방송 커버리지는 크게 확대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 그러므로 권역을 높여서 광고수입을 높이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기부 후원금, 이 두 가지로 방송국을 운영하라고 하는 건데,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해본 결과 이견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정부 측에서는 '자신이 없으면 본 사업에 뛰어들지 않으면 된다.' 고 얘기했다. 너무 어이 없는 대답이었다. 지자체는 지원하려고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마포FM에서 아침에 하는 시사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지역에 아현 뉴타운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뉴타운 인가 허가와 관련하여 취재에 들어갔는데 어제부터 구에서 전화가 온다. 구의원이 '그걸 왜 취재하느냐' 고 묻더라. 구청 담당직원이 전화해서 '그게 과연 취재할 가치가 있냐' 라고 묻더라. 구청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을수록 구청에 얹매이게 된다. 공동체라디오의 도입취지로 지방자치

에 대한 대안· 대비 · 대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입맛에 맞는 방송밖에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자체 재원을 확충해서 운영비로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더구나 지자체는 틈만 나면 재정 지원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법으로 공동체라디오를 비영리단체라고 명문화해놓고, 실제로 영리를 추진하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방통위에서 본사업이 시작되면 공동체라디오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시범사업은 본사업 시작과 함께 종료한다' 고만 되어있고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었다.

그리고 출력이 올라가야 된다. 10와트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방송법 개정을 해야 한다. 개정된 방송법이 출력을 10와트 이하로 한 것은 정통부와 방송위간의 줄다리기 게임이 된 측면이 있으므로, 바뀌어야 한다. 경험상 도심에서는 못해도 30와트, 지방에서는 100와트 이하로 해야 한다.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간섭과 혼선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미국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테스트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못했다. 담당자가 전파환경을 모른다는 얘기가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영어FM 하면서 1와트의 천 배에 달하는 1킬로와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꼭 다시 얘기해봐야 한다.

공동체라디오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정식으로 밀고 가는 방송으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차라리 못하면 못하겠다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국가기관이 가져야 할 자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데 왜 합니까' 라고 묻는다. 우리의 대답은 '공동체라디오에게는 공동체라디오의 꿈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지방자치를 활성화 하고, 지역에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지역의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어서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런 꿈이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방통위가 새롭게 구성이 되었으니,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라디오에 대해 머리로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왜 필요하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정서상의 공감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체라디오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더 감명 깊게 얘기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광고 얘기가 나왔는데, 공동체라디오는 광고로 갈 수 있는 매체는 절대 아니라고 본다. 재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현실에서 어렵다는 건 알지만, 수용자가 공감하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비록 기술적인 한계로 많은 사람이 듣지 못하지만, 그 한계 내에서의 수용자와 공감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큰 주류 매체들이 공동체라디오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만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큰 매체들과의 연대 속에서 공동체라디오의 필요성과 정체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공동체라디오에는 기본적으로 참여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은 데서 이루어지는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싶기도 하지만,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공동체라디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당장 짧은 시간에 무엇을 이루어내는 참여가 아니라, 생활하는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참여여야 한다. 사회적 통합 같은 표현들은 사실 공동체라디오의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 보다는, 공동체라디오의 본질은 다양한 사고를 갖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갖는 기회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 도입 논의가 좀 늦은 측면이 있다. 인터넷 매체가 있어서 참여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인터넷매체의 출현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라디오의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첫째로 공동체라디오는 오프라인에서의 결속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인터넷매체는 사실상 지역을 넘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의미가 강하다. 반면 공동체라디오는 지역사회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자들이 지역민들과 어떻게 교류했는가에 대해 설득력 있게 얘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사회에 대해 발언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담당기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책 기본은 신뢰성이다. 그 점이 약했다. 일정을 빨리 해달라는 것은 나로서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도입과정에서 산업적사고가 강화될 가능성이 많아서 우려된다.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인 투자 등으로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동안의 잘못된 방송정책 관행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장 시장을 인위적으로 형성하기보다는 실제로 생산에 필요한 문화적 자원과, 생산을 소비할 수 있는 문화적 준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류매체가 아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공동체라디오가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심의에 관해서 보면, 영향력이 작은 매체와 영향력이 큰 매체에 대한 심의기준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은 현실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심의라는 것은 방송의 영향력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공동체라디오에는 별로 강요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라디오의 성격과 정체성을 고려했을 때 옳다.

공동체의 범위를 어디로 잡을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 와트 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라디오가 도달해서 사람들 사이의 교호를 이뤄낼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맞다.

▷ 정 승 (방통위 지상파방송과 사무관) : 2006년 10월 방송법 개정.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 본사업의 토대를 이루어준 시범사업자와, 관심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감사드린다. 아직까지 세부 정책사항이 결정되지 않아 죄송스럽다.

시범사업지역에서는 8월까지 본사업자를 확정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이지만,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주파수 사전 수요조사 확인 작업이 지연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21개 수요조사 지역에 대해서는 연내에는 사업자선정까지는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보다 많은 지역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제작비지원과 관련해서는, 구 방송위원회의 의견대로 현재 예산안에 공동체라디오 지원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역종사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겠지만, 나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 직접적 지원보다는 공동체라디오의 자립기관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 토론 ② -

▷ 정용석 (FM분당) : 방통위원회가 발족되기 이전까지 방송위원회와 방송업무, 정책에 대해 중복된 판단을 해 오고, 기싸움 때문에 혼선을 빚어왔는데 방통위원회가 발족되어 축하

드린다.

라디오방송사업이 정규사업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이 시기와 맞추어 신규사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방송에 관한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송위원회도 주요 국가정책기관이니가 방통위로서는 일관성과 체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승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범사업자를 정규사업자로 전환시킬 때에 신규사업자가 정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은 시기에 해줘야 한다. 12월달에 가용주파수 사전수요조사를 신청했다. 사실 이것도 정부에서 해야 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희망업자들을 전부 조사해서 신청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책임성 없는 정부가 어디 있나. 공동체라디오 방송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 **안병천 (관악FM)** : 3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세 가지이다. 정책전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재고 시에는 공동체라디오사업의 목적을 다시금 확인해줬으면 한다는 점, 과제의 재설정을 토대로 계획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시범사업 3년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이렇다. 영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시범사업을 했다. 2년 뒤 보고서에 '지원금 때문에 창조적 경영과 운영을 하지 못했다' 는 말이 있었다. 우리 쪽에서도 리플렛이나 홍보물을 만들려고 시도했었다. 내가 만들기로 했었는데,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 서류를 만드느라고 결국 리플렛은 초안정도에서 더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라디오는 매우 많은 성과물들을 가져왔다. 그 성과물을 공유하고 자랑할 의지가 있다. 그 자랑할 판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담당 사무관은 3회, 주무관은 5회 바뀌었다. 소통할 통로가 뭔지 몰라서 곤란했다. 2001년도부터는 담당위원이 아예 없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05년에 용역보고서를 1회 제출했고, 그 이후 공식적인 내용수정조차 없었다. 지난 11월의 공청회도 일방적이었다. 3년 만에, 시범사업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150명에 육박하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목적사업에 맞게 방송제작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해가고 있는데 더 잘 하지 못해서 아쉽다.

공공영역확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라디오는 맞물려 있다. 교수진 자문단, 경영컨설팅과 연수, 공중파3사에 내보낼 광고홍보비용까지 지원하는 등 시민사회단체에 교육과 훈육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충실하게 지원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인건비, 운영비 없이 제작비만 지원해준다. 그 외의 것들은 자원활동가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한다. 이런 3년이었다.

▷ **임상택 (마포FM)** : 정 승 사무관계서 좀 더 자세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10월에 iTV가 나오고 디지털케이블이 급진전하는 환경에 있는데, 방송수혜자들에 대한 미디어복지나 참여의 구조가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안전장치가 깡그리 없어지는 흐름이다. 우리나라가 IT를 강화하고 영상지식컨텐츠를 강화하려면 전자민주주의나 작은 방송 같은 것이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환경을 만들 때 산업가능성도 커지는데, 지금은 디지털산업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점을 수정하면 훨씬 효과적인 예산투자가 될 것이다.

▷ **박채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 내년 예산에는 공동체라디오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그것이 전 방송위원회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런데 2008년도 자료에 따르면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인지도확산과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1년까지는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다. 이것이 방송위원회의 입장이었다. 왜 갑자기 바뀌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이에 근거해서 내년 예산 편성시 공동체라디오관련 예산도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성순 (영주FM)** : 가장 큰 문제는 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는 사방이 산이라 어려움을 겪습니다. 방송출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폐쇄적인 것 같습니다. 왜 일괄적으로 동일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30와트까지가 상한선인데, 20와트 이상 하니까 다른 전파에 방해를 받는 경우, 지방 면 단위에 중계소를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적극성과 지혜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출력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작은 중계소라도 설치해서 전파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았으면 좋겠다.

▷ **김경환** : 사업자들이 출력증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얼마만큼 늘릴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의 교통방송은 원주 가도 잘 들린다. 원주에도 교통방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자들은 가청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있는데 출력주파수가 없는가. 이런 전체적인 정리도 필요하다. 그걸 정리하면 주파수가 나온다. 영어FM 뿐만 아니라 YTN 보도채널도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사업자들의 욕구를 규제기관이 매끄럽게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규제기관으로서도 앞장서서 출력을 높여주겠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결국은 힘싸움이다. 사회적문제제기와 이슈화를 하는 것만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 **주은경 (방송구성작가)** : 비전문가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2004년부터 시범사업을 해온 업체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성과가 크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잘 와닿지 않는다.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은 외국 사례를 많이 참고할 텐데, 그 나라들의 정부지원은 어떤 방식인지 궁금하다.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 **정수경** : 지금 전국에 8개 시범사업자가 있다(서울 관악·마포, 경기 분당, 공주 금강, 여주, 나주, 광주, 대구 성서). 공동체라디오를 운영하는 것의 대부분 자원봉사자다. 많게는 100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방송사가 있고, 내가 있는 성서의 경우 50명 정도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고 싶은 방송과 할애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맞추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시스템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기존의 방송국에서 마이크가 할애되어있지 않은 사람에게 마이크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나와서 직접 자기나라말로 송출하는 방송을 한다. 이런 서비스는 공동체라디오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소식이나 본국소식을 전달받기도 하고, 예컨대 인도네시아 등에 큰 재해가 있었던 경우 실제 방송을 통해 가족 소식이 전달되기도 했다. 또 하나가 장애인들이 직접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직접 방송에 제작하는 '담장 허무는 엄

마아빠들'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대본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출간했고, 지금 판매는 5000권을 돌파했다. 기초적인 기술적 제작지원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부분을 그분들이 직접 한다.

또 인터넷방송과 달리 주파수를 가진 지상파방송이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서로가 넘나들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지역주민들의 의제를 여론화하고 공론화하는 함께 만들어나가는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발언대 프로그램이다. 취재하고 함께 논의하는, 지상파방송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공동체라디오만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2년째 통런중이다. 이렇듯 지역의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소수계층의 방송권익을 신장시키는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는 적합하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어린이방송도 우리의 자랑이다. 지금 고1이 DJ 하고 있다. 이 꼬마는 우리 방송을 만나면서 방송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공동체라디오 내에서는 상상가능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상상력의 빈곤일 뿐이다. 그래서 항상 즐겁고 유쾌하게 진행될 수 있다.

▷ **송덕호** : 성과는 대부분 비슷하다. 좀 더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3월 17일부터 아침에 생방송 시사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다루는 것은 대부분 지역정보 형식이다. 동네 어르신들 모시고 노인잔치 했단지, 어디에 조그만 도서관이 개관했다든지, 지역에서 일어난 작은 일들에 대해 직접 당사자들을 모시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지자체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같이 취재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라디오를 듣고 있다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알게 됐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하나 지역의 작은 목소리를 찾아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나.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다. 그런 얘기들 속에서 어쨌든 지방자치가 하나하나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공동체라디오는 큰 방송들이 쉽게 놓쳐버리는 작은 문제들을 고집여내서 지역에서 이슈화하는 유일한 방송이라고 생각한다.

▷ **김경환** : 외국사례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가 다 나와 있는 상태이다. 외국에서는 주로 공적 펀드를 만들어서 공동체라디오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세금이든 기금이든 종류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방송 전체의 발전을 위한 펀드나 기금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공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공동체라디오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프랑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규제를 풀어주니 순식간에 전국방송으로 바뀌면서 상업적 목적을 추구하게 되어 버리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 각종 관련자료들이 충실히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 **양창식** : 공동체라디오도 휴대폰을 따라가서 세계적인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 공동체라디오도 마치 지역신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어렵게 공동체라디오를 시작했지만, 세계적인 산업으로 클 수 있다. 일본은 전파일간지가 60년전에 생겼다. 우리는 전파일간지가 아직도 없고, 전파 쪽에서는 상당히 후진적이다. 모든 것은 시장에 토양이 형성되어야 한다. 지역에 토양을 만드는 것도 방송에 임하는 사람이 노력해야 한다. 여기 모인 이 젊은이가 지역방송을 가지고 세계를 누빌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 **최연진** : 사무관님께 한 가지 질문이 있다.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알고 싶다. 접수를 받고 지금 검토 단계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제출한 주파수가 확실한지 아닌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 주파수를 인정을 하고 그 주파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다.

▷ **정 승** : 솔직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다. 안다 해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듯하다.

▷ **박채은** : 일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화로 문의했었다. 전파연구소에서 이미 시뮬레이션 작업까지 다 했고 5월 10일에, 5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나오진 않고 그 사이에 영어FM 얘기가 나왔다. 물론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아무튼 내가 문의했을 때는 거의 다 됐다고 기술담당관이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셨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게 이유는 있겠지만 이해가 잘 안가는 측면이 있다.

▷ **송덕호** : 업무를 새로 맡으셔서 아직 채 파악을 못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지금 나온 얘기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이상훈** : 이 자리는 공청회가 아니다. 담당부처에서 나와 주셨는데 우리가 마치 몰아붙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될까봐 걱정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전문가로서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개인적인 입장이라도 한마디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 **정 승** : 나는 공동체라디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동체를 육성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 부딪치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나라고 왜 예산을 지원하고 싶지 않겠나. 그렇지만 정책행정기관의 입장도 있고, 순수히 방통위가 예산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당국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작지원이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사정을 다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그냥 '제작지원 중단합니다' 라고 하는 단편적인 차원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 **이상훈**: 제작지원 중단은 공식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인가.

▷ **정 승** : 그렇다. 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 **정용석** : 정규사업자 사업자선정이 연내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체의 정규사업 도입시기와 맞추어 신규사업자도 동시에 한다는 결정과 발표가 있었다. 같은 시기에 신규사업자도 정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고를 촉구드리고 싶다.

▷ **정 승** :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경지에 왔다. 주파수 확인 작업이 지연되는 문제도 있고, 방통위가 2-3개월 정도 업무를 못했던 기간도 있었고 구 정통부의 전파 관련 기관들의 이관 문제 등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8월이면

종료되므로, 같이 한다면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

▷ **이성순 (영주FM)** : 지원중단의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우리가 허가를 받으면 허가받아서부터 광고행위, 영업을 한다고 치자. 광고는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기간과 설득기간 다 됐더라도 광고료를 받는 시기는 3개월이 더 걸린다. 8월에 딱 그만두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감안해주었으면 좋겠다. 일반 지상파방송에서도 광고료는 3개월후 유효하다고 하고 있다. 광고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 그 기간까지도 감안해 주어야 한다.

▷ **이상훈** : 요즘 우리 사회가 1988년경의 프랑스를 보는 것 같다. 사회당 정권 이후 그 다음 정권이 내각을 우익이 잡았다. 좌우동거정부가 시작됐는데, 그때 모든 공공기업체를 민영화하는 바람이 불었다. 사회적으로 혼란한 분위기가 2-3년 지속되었고, 그때 그런 혼란에서 그 나라는 빠져나오기 힘들었던 것을 직접 경험했었다.

우리가 어렵게라도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재미로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 꼴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힘들더라도, 언제든지 이런 자리들을 마련할 생각이 있으니, 이런 토론의 장을 충분히 마련하고 담당부처에도 전달하여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